

3» 외대 학생들, 총장 모의투표 진행



6» 그린캠퍼스가 가까워졌으나 의식 제고 필요해



8» 회기동, 동대문구 위반건축물 수 '1위'



양 캠퍼스 제50대 총학생회 선거가 진행 중이다. 왼쪽부터 서울캠퍼스 'KHUtopia' 박원규(사학 2014) 정후보, 국제캠퍼스 '열림' 김호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 '동행' 배득현(산업경영공학 2010) 정후보이다. <관련기사 4면>



노동부, 대학원생 조교 근로자 인정 대학도 조교도 '발만 동동'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고용노동부가 대학원생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가 처음으로 생겼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2일 동국대 한대식 총장을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동국대 전임 대학원총학생회는 지난해 12월 '대학원생 조교의 업무 형태나 내용이 교직원과 다르지 않은데도 대학이 조교의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건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며 한 총장과 동국대 임봉준 법인 이사장을 고발했다. 대학원생 조교에게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과 연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다. 고발을 접수한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학생 조교의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실질적 사용자인 한 총장은 이를 묵과한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검찰 송치 소식이 전해지자 동국대는 공식 입장을 내고 "첫 사례가 된 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관계 법령과 규정에 따라 행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있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우리학교에서 열린 대학원인권토론회에서 동국대 대학원총학생회 서정호 회장의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행동하기 전에 구성원과 꼭 이야기 하라"는 발언이 재조명된다. 고발로 인해 오히려 현재 대학원생들이 겪는 피해가 크다는 설명이다. 당시 서 회장은 "대학원생은 근로자인가 학생인가"라는 주제로 말하던 중 "조교를 근로자로 인정하는 건 좋은 일이지만 고발로 인해 조교 인원이 감축됐고, 피해액을 보상하기 위해 대학원생들의 등록금이 인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 회장은 "근로자로 인정받으면서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학생도 있고 조교 장학이 축소되는 등, 예상치 않은 부작용의 피해는 생각보다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조교장학금 상한선은 500만 원이다. 근무 중 수업을 듣는 시간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4일, 하루 8시간 근무를 한다고 가정하면 시급은 9,765원인 셈이다. 실제로 500만 원 장학금을 받고 있는 대학원생 조교들이 적지 않다. 대학원생 조교가 노동자로 인정된다면 이 시급 9,765원보다 높은 수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지도 고려해 봐야 할 대상이다.

우리학교 일반대학원 윤단비(무용학) 회장은 "교수님이 부르면 바로 가야하고, 공부 양이 정말 많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수가 없다"며 "500만 원이라도 받으면서 조교 업무를 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반대로 "받는 돈에 비해 업무가 과중하다고 느끼는 의견도 많다"고 말하기도 했다. 대학원생 조교들 간에도 근로자 인정에 대해 상반된 여론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동국대에서 촉발된 대학원생 근로자 인정 앞에 대학원생 조교도, 대학도 이도저도 못하는 신세로 얼어있는 모양새다. 대학의 선진노동문화를 위해 정부가 나서야 할 지점이 분명하다.

입학금 감축, "정부 지원이 전제돼야"

양윤주 기자 cyanide@khu.ac.kr

현 정부 100대 공약의 일환인 '입학금의 단계적 폐지'가 교육부, 대학, 학생 간 뽀족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며 제자리를 걷고 있다. 지난달 22일 열린 교육부와 사립대학총장 연합(사총협)의 협상에 이어 지난 9일 열린 교육부·사립대·학생대표 간 2차 회의 역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사총협과의 협상에서 입학금 단계적 폐지의향이 있는 대학에 한해 '학교별 입학금 감축 계획안'을 받았다고 고지했다. 우리학교는 내년 입학생에 대한 입학금 감축 계획이 없으며, 계획안 또한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정예산처 이승민 계장은 "입학금 감축이 현재 우리학교와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 사이에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밝혔다.

지난 9일 2차 회의에서도 '입학금 일부 인정과 단계적 감축'을 주장한 사립대학 측과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학생대표의 의견이 평행선만 그린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학교의 입학금은 6년째 91만 2천원으로 유지됐다. 서울지역 대학 평균인 76만원보다 약 15만 원 높은 금액이다. 지난 제48대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는 대학마다 징수되는 입학금이 다르다는 점, 입학금 결산 내역이 따로 공개되지 않는 점, 명분이 부족하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입학금 폐지를 주장했다. 또한 현재 제49대 서울캠 총학도 '입학금 폐지를 적극적으로 돕겠다'며 공약으로 내세워 서명운동을 진행한 바 있다. 국·공립대는 이미 지난 8월 입학금 폐지를 선언하기도 했다.

우리학교는 입학금에 대해 "고등교육법 제11조 1항(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

금을 받을 수 있다)에 근거해 납부되고 있다"며 "수업료와 입학금 모두 등록금이기에 입학경비로만 쓰이지 않아도 문제가 없고 입학금만의 사용내역을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붙붙은 입학금 사용내역 공개요구...오는 12일에는 소송 청구 예정/대학주보 온라인, 2016.9.29)

입학금 감축이나 폐지를 위해서는 입학금 감축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수라는 것이 대학 측의 주된 입장이다. 미래정책원 권오병 원장은 "사립대학에 공적기능은 요구하면서 지원을 하지 않는 것은 어폐가 있다"고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교육부는 사총협과의 협상에서 입학금 단계적 폐지를 추진하는 대학에 국고사업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지만 대학은 '인센티브'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권 미래정책원장은 "인센티브는 불명확한 지원"이라며

"입학금을 감축한 국립대학에 주는 지원금 같은 확실한 약속을 원하는데 교육부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총협이 협상에서 '입학금을 감축하면 등록금을 인상해야 한다'라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권 미래정책원장은 "언론에 나온 것처럼 '모 아니면 도다'라는 식의 입장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선을 그으며 "앞으로도 등록금을 올리지 않는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9월 12일, 교육부가 분석·발표한 'OECD 교육지표 2017'에 따르면 고등교육 공공교육비에 대한 정부 지출 OECD 평균은 70%인 반면 우리나라는 34%에 불과했다. 권 미래정책원장은 "학교는 학생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교육부와 이성적인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교수의회 "공개답변 하라", 책임부총장제 재질의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교수의회는 한균태 대외협력부총장을 특정해 책임부총장제에 대해 재질의했다. 지난 6일 우리신문을 통해 한균태 부총장은 교수의회의 첫 번째 질의에 대해 답변했다. 이번 재질의는 한균태 부총장이 우리신문을 통해 한 답변에 대한 것이다. 교수의회는 "본부의 인식에 깊은 실망감과 경악을 금치 못한다"며 "어떠한 진정성과 고뇌와 설득의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한균태 부총장에게 직접 재질의를 했다. 교수의회는 10월 11일 책임부총

장제도 신설에 관한 문건이 공개되고 난 후 ▲책임부총장은 법인 정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책임부총장으로 내정된 한균태 대외협력부총장의 자질이 충분치 않으며 ▲책임부총장의 직위가 총장의 책무에 해당되는 점을 들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미래정책원과 한균태 부총장은 ▲책임부총장의 지위는 대외협력부총장의 지위와 같으며 ▲교수들에게 연구를 권하는 정책에 대한 반작용이며 ▲대외협력부총장의 역할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총장의 책무를 이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교수의회는 지난 9일 공개질의서를 통해 한균태 부총장에게 세 가지 재질의를 던졌다. 이번 재질의는 이전 첫 번째 질의서와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다. 그러나 질의 대상을 '한균태 대외협력부총장'으로 특정한 것이 이번 재질의에서 눈에 띄는 점이다. 교수의회는 ▲교수의회 보직자 평가에서 최하점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보는지 설명하라, ▲책임부총장으로서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라, ▲교수의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교수의회는 16일까지 공식

답변 요구를 했지만, 한균태 부총장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이다.

교수의회 이성근 의장은 "공개 답변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제 다른 방법을 통해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며 "공개 질의에 대한 답변은 전체 교수들에게 보내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공개 질의 이후 한균태 대외협력부총장과 미래정책원이 우리신문을 통해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종게 말하면 아쉽고, 나쁘게 말하면 교수의회를 무시하는 행위가 아닐까 싶다"며 한 대외협력부총장의 직접적인 답변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알림

대학주보 SNS로
더 다양한 대학주보를 만나보세요!

- 페이스북 페이지 <https://www.facebook.com/khunews>
- 카카오톡 오픈 ID : 대학주보
- 에브리타임 : 대학주보 게시판
- 트위터 : @khunesws
- 인스타그램 <https://instagram.com/khunews/>

전문가 칼럼

교수·조교 상호존중 필요한 때
김중백(사회학 교수) 교수 >>7면



시선

사설

30년 바라보는 등책위, 변화하는 환경 반영하자

2017년도 서울캠퍼스 등록금정책위원회(등책위) 활동이 최근 종료됐다. 본디 등록금 책정을 위해 결성된 등책위는 대학의 주요 보직자와 학생대표가 만나는 자리로 학사제도 전반, 교육환경, 복지 등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는 자리로 탈바꿈한지 오래다. 올해 등책위 역시 외국인 등록금을 비롯해 SPACE21 사업에 따라 발생할 기존 공간 사용 논의가 진행됐다. 국제캠퍼스에선 등책위를 통해 이원화 문제 해결을 위한 TF 구성과 우정원 사태와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기도 했다.

지난 1989년, 사립대학 등록금완전자율화 이후 우리 학교는 자체적으로 등책위를 구성하고 운영해왔다. 교육수요자에게 가장 민감한 주제 중 하나인 등록금에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우리 학교가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소통의 가치에 부합하는 기구라 할 수 있다. 교외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법적 기구인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의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발표 이후에야 설치된 것이다. 그러나 변화하는 학내의 상황에 발맞추지 못하는 모습의 단편이 발견된다.

대표적인 것이 올해 등책위의 ‘외국인 등록금 7% 인상 합의’다. 내국인 학생의 등록금은 고등교육법에 따라 엄격히 제한된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을 받을 수 없어 사실상 등록금 동결을 강제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초, 교육부가 이 등록금 상한제에서 유학생을 제외시키며 우리 학교는 유학생을 대상으로 7% 인상된 등록금 고지서를 발송했다.

당사자가 빠진 논의
내년엔 바뀌어야

이는 등책위 및 등심위를 거치지 않은 고지서로, 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2014년에도 인상된 등록금이 고지된 후 등책위와 등심위를 거쳐 동결이 결정되며 차액이 환불된 사례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올해 등책위는 7% 인상안을 일단 수용하고 추후 논의를 내년으로 기약했다. 정작 당사자는 참여하지 않은 논의의 결과였다.

우리 학교를 찾는 유학생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5년 1,700여 명에서 올해 2,317명이다. 이들이 내는 등록금 또한 적지 않다. 입학금 폐지와 등록금 동결 등 정부와 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은 점차 대학에 가혹해져 가는 가운데 이들은 논의 테이블 밖에 있었다. 2018학년도 총유학생회 ‘처음처럼’ 선본은 1번 공약으로 등록금 인상분 철회와 반환을 내걸기도 했다. 그들의 주장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들이 등책위에 앉을 수 있도록 구성이 바뀌어야 한다.

이제는 등책위 구성에 이들을 포함시켜 보다 포괄적인 논의를 펴 갈 때다. 등책위가 등록금 뿐 만 아니라 학사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테이블로 그 역할이 커진 만큼 다양해진 학내 구성원 변화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2017학년도 등책위 활동이 끝난 직후지만 곧 내년도 등책위가 시작된다. 관성적으로 행해지는 등책위가 아닌, 변화한 상황을 반영해 함께 변해가는 등책위의 모습을 기대한다.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열려
춧불과 대학의 미래 성찰

미디어·여론 동향 2017.11.6.-11.19

여론동향팀 khunews@khu.ac.kr

지난 7일과 8일, 미래혁신원 ‘함께하는 사제’ 캠페인의 일환으로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 릴레이 특강’이 열렸다.(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 릴레이 특강 열려/대학주보 온라인, 2017.11.8) 후마 소속 교수 11명은 ‘연애’, ‘유학생활’ 같은 유쾌하고 유익한 주제로 짙막한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실 밖에서 교수와 학생의 교류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획된 ‘함께하는 사제’ 캠페인은 지난 가을 대동제 기간 동안 교수와 함께하는 황금마차, 캠퍼스 투어 등으로 꾸려졌다.

의과대학 김도경 교수팀은 광발성 특성을 가진 소재로 몸 속 질병을 관측할 수 있는 생체 영상화 신소재를 개발했다. (“몸 속 질병 영상으로 관측한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11.6) 질병 작용원리 규명과 진단, 신약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생체 영상화 분야에서 김 교수팀은 새로운 생체 영상화 소재를 개발하고 이를 이광자현미경에 접목한 연구를 수행했다. 다공성 실리콘 나노입자를 이용한 새로운 생체 영상화 소재를 이용해 살아있는 동물의 체내에서 나노입자가 암 부위에 응집하는 현상을 실시간으로 관측했다. 이는 살아있는 동물에서의 생체 영상화 구현 가능성을 최초로 밝힌 것이다. 김 교수는 “특정 질병의 선택적 영상화, 약물전달, 진단 및 치료 연구가 더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고 말했다. 연구 결과는 소재분야 세계 최고 권위 저널 온라인 판에 게재됐다.

지난 3일 ‘제5회 후마니타스 글쓰기의 날’ 행사가 개최됐다.(“후마니타스는 글 쓰는 사람이다”/대학 홈페이지 Focus, 2017.11.14) 글쓰기의 날 행사는 세계평화의 날을 기념해 매해 개최하는 Peace BAR Festival의 연장선상에 놓여있다. ‘춧불과 대학의 미래’라는 주제로 진행된 백일장에서 참가자들은 춧불과 대학의 미래를 성찰하며 글쓰기의 힘을 확인했다. 대상은 에세이를

만평이 있는 취재수첩

만평

가족에게도 유통기한이 있나요?

이소진 기자

이 주의 주제 - 비정규직

또 하나의 가족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문화세계의 창조.’ 문화세계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계다. 사람의,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세상이다. 더 나은 인간, 더 나은 세계를 꿈꾸며 평화로운 지구사회, 풍요로운 미래문명을 창달한다. 이러한 교시를 품고 있는 우리 학교는 구성원을 ‘경희가족’이라 부른다. ‘경희가족’이란 말에는 이러한 경희의 가치가 담겨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희가족에 용해되지 못하고 부유하는 이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2년이라는 정해진 기간 중에만 가족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싫어도 떠나야 한다. 과연 이들을 ‘가족’이라 할 수 있을까.

이들은 바로 우리 학교 ‘비정규직’ 직원이다. 학교는 이들을 2년을 초과해 고용하지 않는다. 우리 학교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수 있는 기회가 없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규직으로의 전환도 없다. 지난 기간 급격히 늘어난 비정규직 직원은 전체 직원의 50%를 넘었다. 그러나 그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단 한 명도 없다.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2017년 우리 학교 비정규직 직원은 463명이다. 전체직원 903명의 51.3%에 달한다. 비정규직 직원은 같은 연수 정규직에 비해 60%에 불과한 임금을 받는다. 사

학연금에도 가입할 수 없다. 대학에서 같은 일을 하지만 대우와 미래에는 큰 차이가 있다. 2년이면 학교를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하고 있어야 하는 시한부 가족이다.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할 텐데 이마저도 쉽지 않다. 채용정보사이트에 경희대를 검색해봤다.

계약직과 파견직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줄을 이었다. 국제캠퍼스에서 사무직 직원을 채용한다는 공고 하나가 눈에 띄었다. (용인)경희대학교 사무행정 파견직 채용, 근무기간 12개월, ㈜스텝스.’ 간접고용이다. 이렇게 고용된 파견직 직원은 학교에서 일하지만 소속은 학교가 아닌 ㈜스텝스다. 학교 사원증을 받고 학교에서 일하고 학교 돈을 받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경희가족이 될 수 없는 신분이다.

취준생 A씨는 12개월이라 명시된 근무기간이 걱정됐는지 게시판을 통해 물었다. “근무기간 12개월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이어지는 대답은 간결했다. “평가 후 1년 연장 근무”

A씨가 만약 우리 학교에서 일하게 된다면 해도 그의 자리는 고작 2년을 그에게 허용할 뿐이었다. 학교는 ‘인간의 인간다움’이라는 의미를 가진 후마니타스 정신을 강조한다. 학생에게는 더 나은 인간, 더 성숙한 인간이 되도록 가르친다.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교육철학이다. 하지만 경희가족이라던 비정규직 직원들은 2년마다 ‘계약만료 노동자’, ‘남’으로 내몰렸다. 가족은 고우나 미우나 쉽게 저버릴 수 없지만 학교는 단호하다.

안전은 ‘사전’으로부터

세시봉

박지영 <기획뉴스팀장>



15일 오후, 포항에서 진도 5.4의 지진이 발생했다. 아파트가 기울고 원룸을 지탱하던 기둥에는 균열이 갔다.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은 큰 지진으로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단연코 수험생이었을 것이다.

정부는 수능을 일주일 미루기로 결정했다. 사상 최초다. 포항 지역 고사장 일부에 균열이 이는 등 파손 사례가 보고돼 수험생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고, 여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수험생들의 놀란 마음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귀가도 제대로 못하는데 미루는 게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정부의 결정에 사뭇 비판적이던 정치권도 ‘합당한 처사’라고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부의 결정은 다양한 함의를 가진다. 한 줄기는 ‘공정함’을 실현한 것이다. 수능이라는 제도는 모두가 한날 한시에 치르는 시험이다. 포항 지역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정함을 제공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가장 큰 줄기는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추가 여진에 대한 우려로 포항 지역 학생들과 시민들이 귀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수험생의 안전을 최우선했다”고 밝혔다. 추가 피해가 일어날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사상 초유 수능 연기
안전이 우선

‘안전’에 대한 조치는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문제가 일어나기 전 조치를 하는 것과 문제가 일어난 후 뒤처리하는 하는 것. 후자에 대해 보통 우리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을 쓴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한다. 소는 다시 키우고 외양간은 고치면 되지만 이미 우리는 세월호라는 돌이킬 수 없는 기억을 안고 있다. 이번 결정은 다시는 되풀이할 수 없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많은 이들이, 그리고 당사자들이 혼란스럽지만 정부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것은 안전에 대한 공감대가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회기동 불법건축물에 대한 취재를 하며 접한 동대문구청의 임장은 너무나도 안이했다. 소를 잃을 때까지 기다리는 느낌이었다. 세입자들도 또한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다. “주인이 다 해결한다고 했고, 이행강제금도 다 내고 있어서 괜찮다”며 말이다.

불과 몇 달 전 멕시코시티에는 규모 7.1의 강진이 일어났다. 324명의 사상자를 낸 사태에서 전문가들은 피해를 더 키운 이유는 ‘인재’라고 분석했다. 무너진 건물 중 최소 3채는 무리한 불법 증축을 한 건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불법 증축이 건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경고를 관할구청이 벌금을 내는 걸로 용인해줬다.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피해가 없다고 넘어가는 이런 방식, 이번 수능 연기가 던지는 함의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알림

대학주보에
당신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대학주보는 늘 열려있습니다. 여러분이 겪은 모든 일을 이야기해주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사소한 추억부터 어려운 상황까지 함께 나눠주세요. 늘 당신의 옆에 있겠습니다.

대학주보 홈페이지 좌측상단 기사제보



교훈 학원의 민주화 | 사상의 민주화 | 생활의 민주화 경희대학교

대학주보

1955년 5월 12일 창간(주간)

발행인 조인원 | 편집인 조영욱 | 편집장 이수형 | 제작/인쇄 중앙일보미디어디자인(주)
구독료 1년 1만원 | 구독 02-961-0093-4 | 주소정정 02-441-7317(미래21회)
인터넷 대학주보 http://media.khu.ac.kr | 이메일 khunews@khu.ac.kr

서울캠퍼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회기동) / Tel 02-961-0093-5
국제캠퍼스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사현동) / Tel 031-201-3230-2, FAX 031-204-8121

대학평의위원회 총장선출제 특위 제안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대학평의위원회가 새로운 총장선출제를 제안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지난 17일 열린 제5차 회의에서 대학평의위원회는 교수, 직원, 학생(대학원생 포함), 동문 등 구성원 참여를 보장하는 새로운 총장선출 제도를 연구하고 법인에 제안하기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에 합의를 했다.

이와 관련해 차기 제6차 평의위원회에서 법인과 총장실 관계자에 선출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경희대학교 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경희지부) 김종현 위원장은 “많은 수의 서울시내 사립대학들이 총장선출 과정에 구성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다”며 “우리 대학에서도 시대의 흐름에 맞게 새로운 총장선출제도를 연구하고 제안할 ‘총장선출제 연구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대학평의위원회가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독자적인 안을 법인에 제출한다 해도 현실화까지는 쉬워보이지는 않다. 기존 총장 선출과 관련된 제도와 절차상 이사회를 통해 정관이 바뀌지 않으면 특위의 제안이 현실화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특위는 연세대학교나 서울대 등과 같이 구성원으로부터 선출된 총장추천위원회를 제도화해 구성원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것을 목표로 할 것으로 보인다.

김종현 위원장은 “이미 지난 교수의회, 노동조합 등 대학평의위원회 대표들이 특위를 구성해 새로운 총장선출제 안을 법인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제도

와 채택 가능성을 묻기 위해 차기 평의위원회에서 법인과 총장실의 의견을 묻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소재대학교수회연회의 대표이기도 한 이성근 교수의회 의장은 ‘회원 대학 총장선출규정’을 배포하기도 했는데 이에 따르면 고려대, 서울대는 총장후보자 추천위원회(총추위)를 구성해 평의위원회 혹은 이사회와 평의위원회의 추천으로 총장 후보를 정하고 있다.

한편, 이날 평의위원회는 스페이스21 캠퍼스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기채를 심의하고 학칙 일부를 개정하는데 동의했다. 대학측이 제공한 계획안에 따르면 리모델링 1차 사업의 경우 음악대학관이 14.3억, 문과대학관이 4.6억, 정경대학관이 5억, 외국어대학관이 34.8억원의 총 재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1차 사업 기간은 올해 11월부터 2018년 8월까지로 설정됐으며 9월 이후로는 2차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학교는 이번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연리 2.3%(변동금리)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을 조건으로 총 58.8억원의 기채를 얻기로 했다. 이번 기채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원금상환이 진행되는데 원금 8.4억원과 이자 0.9억원이 순차적으로 상환될 것으로 평의위원회에 보고됐다.

학칙과 관련해서는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 새롭게 편입됐으며 성적인정을 위한 최소 출석 요건도 2분의 1 이상으로 새롭게 규정됐다.



제5차 대학평의위원회에서 학칙개정 내용을 보고 하는 교무처 지은림 처장.

한국외대 학생회, 총장선출 ‘모의투표’ 진행 “구성원 모두의 의견 반영하는 새로운 선출제 필요”

양윤혁 기자 yangyun0820@khu.ac.kr

한국외국어대학교(외대)에선 새로운 총장의 선출을 앞두고 분주한 모습이다. 51대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선 총장선출에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총장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해당 결과를 교수협의회와 이사회에 제출해 의견을 개진할 계획이다.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6일간 진행된 모의투표에선 전체 유권자 9031명 중 1534명의 투표로 16.9%의 투표율을 기록했고, 기호 2번 유기환 교수가 472표(31.3%)의 득표로 1위에 올랐다. 현 총장인 기호 6번 김인철 교수는 44표(2.9%)에 그쳤다.

한국외대는 학생 대상 총장 모의투표를 진행했다

비대위 측은 현행 총장선출 제도를 바꾸기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비대위 백유진 위원장은 “현행 총장선출 방식은 모든 구성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며 “학교의 대표자를 뽑는 만큼 총장선출은 구성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외대 교직원 노동조합(노조) 역시 ‘총장직선제’를 요구하고 있다. 전국대학노조 외대 지부 정준에 부 지부장은 “총장선출은 대학 민주주의의 꽃”이라며 “총장선출이 몇몇에 의해 진행되면서 대학운영이나 발전에 구성원들의 요구가 차기 총장의 정책에 반영되는 것에 한계가 있다”고 입장을 같이했다. 이어서 “모의투표

의 경우 현행제도를 오히려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노동조합은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외대 총학생회와 노동조합은 ‘총장직선제’로의 변화를 두고 뜻을 함께하고 있다. 정준에 부 지부장은 “‘민주적 총장 선출을 위한 공동 대책 위원회(공동위)’ 자리에서 총장선출 방식을 논의하고 공동으로 성명도 낸 경험이 있다”며 “이번 모의투표에서는 입장을 달리했지만, 이사회에서도 최소한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당부했다.

총학생회 역시 제도권 내 학생 투표권 보장을 요구했다. 비대위 백유진 위원장은 “실제로 투표를 위해 오신 학생도 주변에 투표결과가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것인지 의문을 가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전했다”며 “제도권 내 투표권이 보장됐다면 홍보 자체도 학교 차원에서 진행돼 투표율도 훨씬 높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외대는 교수협의회에서 투표를 진행하고, 1위 추천자를 총장 후보로 이사회에 추천한다. 이를 이사회가 임명함으로써 총장을 선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에서 진행하는 투표결과를 이사회에서 반영해야 한다는 규정이 따로 존재하는 바는 없다.

이에 정준에 부 지부장은 “당시 이사회 선임 방식을 대신해 교수 직선제를 타협안으로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25년 동안 그마저도 비민주적이고 나머지 구성원이 대학운영에서 소외되는 결과를 낳았다”고 평

가했다. 이어 “관행이라며 학교 운영의 실질적 권한을 이사회와 교수들이 독점하고 있다”며 “노조 탄압을 진행했던 총장이 2차례나 선출되고, 결국 작년에 유죄판결이 났음에도 자성의 목소리는 전혀 없었다”고 현 상황을 강하게 비판했다.

교협 측이 총장선출 방식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들과 온도 차가 있다. 이번 총장선출 과정에서 규정을 바꿀 시점은 이미 넘어섰고, 제도권 내 투표권이 없다고 해서 나머지 구성원들이 소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교수협의회장 김은경(법학) 교수는 “총장선출 방식 변경은 4년 전부터 준비가 필요해 지금 시점에서 논의할 내용은 아니다”며 또한 “학생들이 자신들의 대표부터 선출해 정비한 이후 총장선거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김은경 교수는 “소외라고 느낄 수 있지만 향후 다양한 방법으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며 “제도권 내의 투표권이 아니더라도 같은 학내 구성원이라는 점에서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 모의투표 결과가 실제로 이사회 결선 투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교수협의회 측에선 이사회 측에서 결정할 일이라며 말을 아꼈다. 학생들이 각각 1, 2위로 꼽은 유기환 교수와 유태영 교수가 교수협의회 1차 투표의 결과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이사회는 관행적으로 1위 후보를 총장으로 선임해온 바 있어 향후 논의의 귀추가 주목된다.

서교련 “언론사 대학평가 당장 중단하라”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지난달 25일, 사단법인 ‘서울소재대학교 교수회연합회(서교련)’가 창립총회 및 정책포럼을 열고 언론사의 대학평가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고려대, 경희대, 서울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국외국어대, 한양대 등 9개 대학의 교수대표가 모여 결성한 서교련은 언론사의 대학평가가 대학 운영 전반을 왜곡시키며 평가지표 또한 그 공정성과 타당성, 신뢰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서교련은 지난 6일 성명서를 통해 대학이

“연구와 교육이라는 대학 본연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획일적 평가기준을 중심으로 인적·물적 투자를 하고 있다”며 “평가순위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불필요한 재정 출혈로 인해 교직원들의 임금과 복지가 악화되며 저임금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언론사의 대학평가 평가지표는 각 대학의 객관적 상황을 왜곡하고 대학의 개혁을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라며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한 평가지표를 제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대학평가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는다”며 “대학의 설립 이념과 규모,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새

로운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대 이사장을 맡은 우리학교 교수의회 의장 이성근(관광대학원) 교수는 “각 대학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지표를 통해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 것은 당연히 모순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언론사 대학평가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정책포럼이나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언론사 대학평가 문제뿐 아니라 학교법인의 재단개혁문제, 교수들의 교권 문제 등을 다룰 예정”이라며 “각 대학의 공공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길을 찾는데 힘을껏”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개설 안내 (서울캠퍼스, 국제캠퍼스)

1. 계절학기 주요 일정

구분	일시	비고
개설과목 확인	2017.11.01(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에 '2017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시간표 공지' 참조
학점교류생	추천기한 : 2017.11.24(금) 17:00 까지 학번부여 : 2017.12.01(금)	학번부여 SMS 안내 문자 발송
수강신청기간	2017.12.14(목) 10:30 ~ 12.15(금) 17:00	본교 홈페이지 오른쪽 하단의 '계절학기 시간표 및 수강신청' 링크 클릭
폐강공고	2017.12.15(금) 12:00 (1차) 2017.12.21(목) 09:00 (2차)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등록금 납부기간	2017.12.18(월) ~ 12.20(수) 16:00	하나은행 가상계좌로 납부
수강정정기간 (폐강과목 수강생)	2017.12.21(목) 09:00 ~ 17:00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2차 폐강과목 수강자에 한함)
수업기간	2017.12.22(금) ~ 2018.01.16(화)	
성적열람일	2018.01.16(화) ~ 01.17(수)	
성적정정일	2018.01.18(목) ~ 01.19(금) 15:00까지	

2. 수업안내

• 수업시간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구분	학점	교시	시간대
서울 캠퍼스	1학점 (실기)	1교시	10:00~11:50	국제 캠퍼스	1학점/3학점	온라인강좌	온라인강좌
		2교시	13:00~14:50				
	2학점	1교시	10:00~11:50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4:50			2교시	13:00~15:45
	3학점	1교시	09:00~11:45				
		2교시	13:00~15:45				

• 시간표 및 강의계획서 확인: 2017.11.01(수) 본교 홈페이지 '학사안내' 게시판 참조

3. 수강신청

• 수강가능 학점: 최대 6학점

- 1) 국제교류처, 취업진로지원처 및 각 단과대학에서 방학 중 진행하는 전공연수, 어학연수, 현장연수활동은 6학점의 제한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2) 타대학 학점교류, Global Collaborative 프로그램은 6학점 범위 내에서만 가능

• 수강신청방법

- 1) 정규학과와 동일한 방법으로 학교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신청(학점교류생 동일)
- 2)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계절학기 수강신청 링크 클릭 → 본인이 직접 수강신청 교과목 선택

4. 수강등록

• 등록금액: 1학점당 89,000원

• 등록방법: 경희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시스템 → 등록/장학 → 등록메뉴 중

[계절학기 등록금 안내] 참조

- 1) 입석사항: 학년) 2017학년도, 학기) 겨울학기, 학번) 경희대학교에서 부여된 본인의 학번을 입력 후 조회
- 2) 확인사항: 신청과목과 납부금액, 본인에게 부여된 하나은행 계좌번호 확인
- 납부방법: 생성된 계좌번호로 등록금 납부
- 1) 등록금 납부 전 본인이 신청한 과목의 폐강 여부를 홈페이지에서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2) 등록금 납부일 이후 수납이 불가하니 등록기간 내에 완납하기 바랍니다.

5. 등록 후 수강취소 및 환불

환불기준	기간	환불금액	수강취소방법
수업개시일 전까지	등록일 ~ 2017.12.21(목) 17:00	전액 환불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본인명의로 통장 사본 동봉)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부터 1/3 경과 전	2017.12.22(금) ~ 12.29(금) 17:00	수강료 2/3환불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수업개시일 1/3 경과한 날부터 1/2 경과 전	2018. 1. 2(화) ~ 1. 4(목) 17:00	수강료 1/2환불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등록금 환불신청서' 작성 (본인명의로 통장 사본 동봉) ※ 폐강과목수강자 포함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수강 취소 불가함)		

※환불금액 지급예정일: 수업개시일 1/2 경과 후부터 환불신청자에게 일괄 지급함. (바로 환불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유의사항

- 개설기준: 전공 10명 이상, 교양(기초/배분/자유이수) 20명 이상
- 전공강좌 개설여부 및 전공수업에 관한 사항은 해당 단과대학 행정실로 문의
- 2017학년도 2학기 현재 수강 중인 강좌는 계절학기 수강신청 불가
- B0 이상의 성적을 받은 경우 계절학기 재수강신청 불가함(2014학년도 1학기 성적부터 해당됨)
- 수강 신청기간 이후 수강강좌 변경은 허용하지 않음(수강취소만 가능)
- 폐강과목 수강자는 환불/수강정정 여부를 결정하여 반드시 해당 기간 내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방문
- 계절학기 수업시간의 2/3 이상을 출석하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 계절학기 수강은 졸업 전 통산 8회, 5년제는 통산 10회, 6년제는 통산 12회로 하며, 편입생은 그 절반으로 함
- 휴학생 계절학기 수강 시 유의사항
- 1) 휴학 중 2회에 한하여 계절학기 수강 가능 (편입생은 휴학 중 1회)
- 2) 졸업유예자는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을 불허함

7. 문의처

- 서울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2)961-9311, 9339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26 경희대학교 청운관 2층
- 국제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031)201-3401~4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멀티미디어교육관 5층

50대 총학생회 선거

‘쿠토피아’ “총학 권한 축소…학생회칙 전면 개정”

서울캠퍼스 총학 입후보자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서울】 서울캠퍼스(서울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는 쿠토피아(KHUtopia) 선본의 당선으로 진행된다. 문과대 학생회장 당시 ‘문과대 버스대금 리베이트의혹’ 사건을 접화한 박원규(사학 2014) 정후보와 IT 벤처기업 창업이력인 송태현(경영학과 2014) 부후보의 조합이다.

쿠토피아는 총학의 권한을 해체하는 데 집중한다. 먼저 “군부독재 시절 사회적 문제들에 앞장서기 위해 마련된 학생회칙을 전면 개정하겠다”며 “유명무실한 학원자주화추진위원회, 인권복지위원회 등을 재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들은 총학과 별개로 자치회비를 분배하며 각종 회의에서 의결권을 갖는다. 이 조직들의 올해 자치회비 사용 내역은 새울제 지원과 벚꽃영화제 진행 등이다. 사실상 총학 내 행정 조직으로 명맥만을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학자추, 인복위 등 ‘유명무실’ 조직 재정비

이 조직들을 재조정 혹은 해체하겠다는 것은 총학의 의결사항 결정권한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의미다. 박원규 정후보는 “총학생회 권한이 너무 비대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정후보는 “현재 회칙은 돈과 권한의 분배가 민주적이지 않다”며 “단체의 목적과 역할을 재정의 하고, 그에 따라 편제도 개편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정후보는 “학원자주화를 한다는데 자주화는 무엇인지 회칙이 설명하고 있지 않다”며



왼쪽부터 ‘쿠토피아’ 선본의 송태현(경영학 2014) 부후보, 박원규(사학 2014) 정후보

“어떤 단체인지를 명확히 정의해 학생들의 공감대를 모을 수 있는 회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쿠토피아는 “교비로 지원받은 예산에 제기된 의혹들을 앞장서 해소하겠다”고 공언했다. 총학 교비회계 사용내역은 지금껏 그 규모조차 공개된 바가 없어 경우에 따라 축제예산 등 총학 재정운용에 대한 각종 의문을 생산해왔다. 박 정후보는 “축제에 마마무를 2,000만 원에 불렀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알 수 없다”며 “결산안에는 있는데 예산안엔 없는 이상한 돈”이라고 교비를 지칭했다.

교비 사용내역 공개로 책임소재 명확한 총학을 꾸릴 것

송태현 부후보는 “일부 보호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다”면서도

“이 생각은 누군가 교비에 대해 내역공개를 요구했을 때 쓸 핑계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다. 교비 사용내역 공개는 총학 재정운용을 옥죄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송 부후보는 “교비 사용내역 공개로 총학 재정이 위축된다면 그간 교비를 잘못 사용해 온 것”이라며 “득과 실이 발생한다면 장기적으로 더더욱 공개하는 게 옳다”고 일축했다. 쿠토피아는 정기 여론조사와 보도 자료 배포를 통한 소통을 약속하며 “책임소재가 명확한 조직을 꾸리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성소수자, 외국인 유학생 등 학내 소수자를 대상으로 한 공약들도 제시했다. ‘성 중립-다목적 화장실’ 설치를 약속했다. 박 정후보는 “지금 교직원화장실 등 버려져있는 공간이 있고, 이 공간들을 활용해 성소수자를 인정하는 환경과 분위기를 만들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에 관해선 “글로벌센터와

국제교육원의 외국인지원팀을 통합하겠다”며 “통역 관련 근로장학을 신설하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선본에 이례적으로 4명의 외국인 유학생(중국인 3명, 일본인 1명)을 두고 정책제안을 보조하고 있으며 중국어 공약집도 배포 중이다.

‘총장직선제’, ‘입학금 문제 해결’ 두 대표 공약 위해 노력할 것

이밖에도 지난 반 년 간 각 단과대의 전·현임 학생회장에게 자문을 받아 단과대 별 고충사항을 취합했다. 음악대학의 시설문제, 법학수업 폐지 등 구성원 별 요구를 정리하곤 이에 “음대생들이 지역사회의 공언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법학수업 존치·개설 방안을 적극 고민하겠다”는 등 각 사안에 대한 입장을 내놨다. ‘총장직선제’와 ‘입학금 문제 해결’은 이

번 총학 선거의 대표공약 격이다. 총장직선제는 내년이 총장임기 마지막 해이고 신설 통합노조와 교수의회가 이미 총장직선제를 주장하고 있는데다 현 정부의 대학정책기조와 일치해 내년의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될 전망이다. 박 정후보는 “학교에 중요한 문제들이 터졌을 때 최종결정권자인 총장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어떤 해결방안을 갖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모른다”며 “오히려 구성원들의 모든 요구가 총장실을 종착지로 소멸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총장이 잘못하거나 잘했을 때 구성원 모두가 이를 공유하고 총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학금 문제 해결 공약’에 대해서는 “사건을 수습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학금 이슈는 이미 지난해 몇몇 학생들의 소송을 통해 법적 분쟁으로 번져 폐지여부를 다투고 있다. 박 정후보는 “입학금이 법적근거가 없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지만 운동의 차원에서 풀어낼 생각은 없다”며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누가 총책임자인지, 상황을 파악하는 것부터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이 내세운 선본명 ‘쿠토피아’는 이상향이다. 박 정후보는 “문과대 학생회 회장을 도전할 시기에 ‘젠 너무 이상이 커서 안 돼’라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은 기억이 있다”며 “혹자의 말처럼 이상을 실현하려다 여러 현실적 난관에 부딪혔었고 주저앉게 됐는데 송태현 부후보 덕분에 그 이상을 되찾게 됐다”고 말했다. 송 부후보는 “우리가 내는 공약이 이상적으로 보인다면 현실이 잘못되겠다”면서도 “한편으론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 같은 학교를 총학생회라도 기대해야 그 절반이라도 가지 않을까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했다.

‘열림’ “캠퍼스 이원화 문제 해결”, ‘동행’ “입학금 폐지와 반환 이룰 것”

국제캠퍼스 총학 입후보자

설지연 기자 jy0622@khu.ac.kr

【국제】 올해 국제캠퍼스(국제캠) 제50대 총학생회(총학) 선거는 경선으로 치러진다. ‘열림’ 선본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와 심자용(화학공학 2015) 부후보가 기호 1번으로, ‘동행’ 선본 배득현(산업경영공학 2010) 정후보와 신승룡(전자공학 2011) 부후보가 기호 2번으로 각각 출마했다. 두 선본 모두 ‘소통’을 기치로 내세운 가운데 공통된 공약이 보였으나 접근 방식에서의 미묘한 차이가 보였다.

두 선본 모두 공약 이행 정도를 학생에게 알리는 것을 소통의 기본으로 삼았다. 게시판 외에도 SNS와 홈페이지를 활용한 공약 이행 정도 보고를 약속했다. 또한 학생의 목소리를 직접 듣겠다는 자세를 취했다. 열림 선본은 분기마다 총학 및 단과대학 학생회에 대한 학생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동행 선본은 ‘학생 직접 참여 TF’를 개최해 학내 주요 사안에 학생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공약을 걸었다.

열림 “학생설문” 동행 “학생참여TF”로 소통

학습권 관련 공약은 큰 관점에서 두 선본이 수강신청 문제 해결과 강의 수 증설을 주장해 비슷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차이점이 존재한다. 열림 선본은 수강 신청 후 강사와 수업 시간에 변동 문제에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기순번제 폐지에 따라 새로운 강좌 매매 방지 시스템을 도입하겠다는 공약



‘열림’ 심자용(화학공학 2015) 부후보(좌) 김효형(일본어학 2011) 정후보(우) ‘동행’ 배득현(산업경영공학 2010) 정후보(좌) 신승룡(전자공학 2011) 부후보(우)

도 내세웠다. ‘강의 수 증설 TF’를 통해 온라인 강의 추가, 7교시 활성화, 필수 교양 증설 등 해결책을 논의하고 제시하겠다는 계획도 있다.

양 후보 수강신청 개선과 단과대학 리모델링에 공감

동행 선본은 정정기간 마감 직전 강의가 폐강 돼 피해보는 학생이 없도록 폐강 강좌 신청 학생에 한해, 수강신청 기간을 연장해 주거나 다른 강의로 넣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필수 과목 정원 110% 개설 의무화와 교양 담당 교수들 증원을 통해 전체적인 과목 수를 늘리

겠다는 공약도 있다. 시설 문제와 관련해 두 선본 모두 ‘리모델링’을 해답으로 제시했다. 단, 외국어대학과 생명과학대학등은 이들 선본의 공약과는 관계없이 동계 방학부터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열림 선본은 “학생들이 진행과정을 확실하 알 수 있도록 학생 참여 TF를 꾸릴 것”이라며 “리모델링 사업에 학생의 요구가 반영되고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 설명했다. 동행 선본 측은 “공적 기관을 통해 안전성 평가를 받음으로써 건물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며 “안전 차원에서 리모델링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선본은 상대 선본에는 없는 공약도 내

세웠다. 열림 선본은 ‘상설기구 신설’을 통해 지속적으로 이원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동행 선본은 이원화 문제 해결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이는 이미 제49대 총학에서 협의가 완료된 사안이다. 이 뿐 아니라 강의 매매 방지를 위한 ‘수강 삭제 지연제도’ 도입, 강의 수 증설을 위해 수요가 많은 강의에 있어 온라인 강의를 개설하겠다는 점 역시 지난 총학에서 논의를 끝내고 시행이 예정돼 있다.

열림 선본의 김효형 정후보는 “49대 총학의 공약과 유사한 것은 맞다”고 인정하면서도 “학교가 그 동안 ‘계획이다’라는 말로 학생과의 약속을 어겨 온 사안에 대해

새로이 공약을 작성한 것이다”고 말했다. 동행 선본은 ‘입학금 폐지와 반환’을 중점 공약으로 꼽았다. 국제캠에서 지난해 10월 ‘경희대 청년하다 입학금폐지운동본부’가 ‘입학금 폐지 운동’을 전개하며 교육부와 학교에 입학금 폐지를 요구한 바 있다. 이후 소송인단을 모집해 입학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입학금 공약은 열림 선본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다. 학생과 함께 입학금 폐지와 반환에 대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이다. 배득현 정후보는 “입학금이 라는 명칭에 맞게 입학에 위해 사용돼야 했으나 사실상 신입생에 대한 추가등록금 형식으로 사용 돼 왔다”며 “회계 공개를 투명하게 하고 입학 외 용도로 쓰이는 돈은 신입생에게 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림 “이원화”, 동행 “입학금” 공약 차별화

입학금 폐지와 반환을 공약하는 한편, 생활비 장학금 개설, 교양 교수 증원과 같이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사안들도 함께 공약했다. 재원 마련에 대해 배 정후보자는 “생활비 장학의 경우 이미 한양대에서 교비 2,000만 원 규모로 시행되는 사례가 있고 동문회나 대외협력처와의 협조, 그 외의 기금마련을 통해 생활비 장학금을 신설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배 정후보는 “교양 담당 교수의 경우에도 과거 교양교수를 대거 채용한 적이 있었다”며 “현재 배분인수 과목에 대한 증원 요청이 많은 만큼 이 부분에 대해 학교의 투자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배 정후보는 “우리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해달라고 정부와 학교에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 밝혔다.

동연 선관위 업무협약 ‘외부 세력 개입’ 논란


신정인 기자 sj0201@khu.ac.kr

【국제】 지난 10일 중앙동아리연합회(동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페이스북, 에브리타임 등을 통해 법무법인 ‘다산’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음을 공지했다. 동연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와 인권 보호를 위해 인권변호사 겸 사이버 명예훼손 담당 조지훈 변호사님과 업무협약을 맺었다”라며, 이는 “학생회 선거기간 동안 발생할 수 있는 반민주, 반인권적 행위들을 미리 예방하고 문제 발생 시 빠르게 해결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경희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되는 직·간접적인 선거 관련 게시물에서 인권적, 민주적 기준에 어긋나는 사항에 대해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법적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업무협약서가 공표된 이후 일부 학생들은 학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업무협약 체결이 선거제식에 반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공통적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외부세력 개입의 문제, 표현의 자유 억압의 문제, 그리고 변호사의 중립성 문제로 압축된다.

먼저, 법무법인과 업무협약 체결이 선거에 그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개입할 수 없다는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조 제3항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 이에 대해 동연 선관위는 “이번 협약에서 변호사님의 역할은 적극적인 개입이 아니라 선관위가 조언을 요청할 경우에만 자문을 하는 형태”라고 해명했다. 정태호(법학전문대학원) 교


SNS 학생여론



이건 법적 조치를 취할테니 알아서 조심하라는 경고적 의미 아니냐




반민주적, 반인권적이라는 단어는 해석의 여지가 다분하다고 생각




업무협약을 맺을 거면 모든 후보를 대상으로 한 변호사와의 계약이 필요한 것 아니냐


동연 선관위



‘외부세력 개입’이라고 지목하는 것은 MOU의 성격과 절차를 모르고 주장하는 것으로 타당하지 않은 내용



MOU는 정식 계약체결이 아니라 ‘의향서’ 정도의 의미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님



충분한 해설이 되지 못해 선거개입과 통제와 같은 부당한 행위로 느껴지게 한 점 사과드린다

수는 “기성 정치의 경우 선관위 자체가 법관을 포함한 법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학생들로 구성된 대학 내 선관위는 선거제식 해석과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히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문제”라며 “선관위가 협약을 맺은 것은 학생자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조 변호사도 동연 선관위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에서 “이 업무협약은 동연 선관위의 조치에 대한 법적 조력을 받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변호사는 동연 선관위가 요청하는 질의 사항에 관해서

만 법적 검토를 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선거에 개입할 의도가 없었음을 밝혔다.

그렇지만 업무협약서를 공표함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제약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윤성이(정치외교학) 교수는 “협약을 맺은 배경이 무엇이든 업무협약서의 공표가 유권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는 데 있어 심리적인 위압감을 줄 수 있다”며 “일반적으로 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관해 토론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장려할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이 업무협약은 올바른 선거문화 확립에 악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 협약을 통해 학생들이 심리적인 압박감을 느낄 수는 있지만, 이것을 법적으로 문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의 해석이다.

이외에도 법무법인 다산의 담당 변호사와 동연 선관위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대한 의혹 또한 제기됐다. 이에 대해 동연 선관위 백승준(유전공학 2015)위원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가까운 영통에서부터 도움을 주실 변호사분들을 수소문하던 도중 조 변호사와 연락이 닿아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말하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더불어 백 위원장은 “변호사 선정과 정부터 공개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해 학생분들로 하여금 변호사와의 유착 가능성과 그분의 중립성에 대한 의문을 품게 해드린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이 크다”고 전했다. 결국, 동연 선관위가 학생들에게 업무협약의 목적과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지 않은 것이 이번 논란의 가장 큰 원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우리학교 학생대표 선거를 통틀어 이런 형태의 업무협약 체결은 최초다. 그러나 동연 선관위는 이번 협약을 체결하고 그 결과를 구성원들에게 통보했다. 또한, 이에 대해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다. 윤 교수는 “공개된 업무협약서만으로는 법적 문제를 검토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협약한 법무법인의 역할과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업무협약의 적용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등을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업무협약서의 공개만으로는 정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김하민(글로벌커뮤니케이션학 2014) 학생은 “이 업무협약서를 공개하는 것이 교내선거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충분히 예견하지 못한 점도 선관위의 과실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더하여 윤 교수는 “선거기간 내 고발조치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 선관위가 이에 대해 검토한 후 때에 따라 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라며 “굳이 업무협약을 맺지 않아도 되는 사안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공표하다 보니 학생들의 불안감이 커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업무협약은 내용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업무협약서를 작성해 이를 대중들에게 공표하는데 더 주안점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백 위원장은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했을 때 기존에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 법적 절차가 진행되기 마련인데 이 업무협약을 체결하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 절차적인 효율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2조(선거원칙)
③ 현 학생자치기구나 학교 당국 그리고 어떠한 외부 세력도 개입할 수 없다. 단, 선거진행에 관해서 학교 당국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가. 학생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 및 선출절차 과정에 반하는 부당행위를 개입으로 본다.

중선관위, ‘외대 서울캠퍼스 이전 공약’ 언급한 외대 김주와 회장 징계 안하기로

이수형 기자 dltbd112@khu.ac.kr

【국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가 외국어대학 김주와 회장을 징계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10일, 한 익명 커뮤니티에서 외국어대 학생회 선거에 출마한 ‘uni-khu’ 선본이 제시한 ‘외국어대의 서울캠퍼스 이전’을 통한 학문별 통합 캠퍼스 조성을 요청’ 공약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여론이 일었다.

김주와 회장은 실명을 밝히며 이 공약과 관련해 현임 학생회가 대학본부와 논의해온 내용을 설명했다. 그 과정에서 “‘외국어대학의 서울캠퍼스 이전’ 가능성이 있으

니 기다려보자’는 게 대학본부 입장이다”라는 등 공약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한 점이 문제가 됐다. 김주와 회장은 “논란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느껴 댓글을 삭제하겠다”며 “징계여부를 포함한 중선관위의 결정을 기다리며 자중하고 있겠다”고 말했다. 김주와 회장은 중선관위에 자진 사퇴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3일, 제6차 중선관위 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외국어대 김명선 부회장은 “김주와 회장이 잘못했으므로 선관위와 학생회장직을 사퇴해야 한다”라며 “(김주와 회장이 uni-khu 선본 출마자와) 학생회를 같이 했던 적이 있으므로 학생들의 비난이

무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총여학생회, 생명과학대 선관위원 등 대다수 중선관위원들은 ‘김주와 회장이 단 댓글들이 해당 선본을 지지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퇴를 반려했다.

동아리연합회 선관위원은 사퇴반려 근거로 선거시행세칙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선거시행세칙 제29조 제4항은 ‘기존학생회에 대한 평가와 비판을 보장하며 맞고 틀림에 대한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 기존 학생회는 필요에 따라 제기된 평가와 비판에 대해서만 반론 및 해명,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 단, 평가와 비판은 반드시 그에 맞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동아리연합회 선관위원은 이를 근거로 “김주와 회장이 기존 학생회에서 논의되던 사항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것은 세칙에 분명히 명시되어있는 잘못되지 않은 행위라 생각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선거운동 당사자가 현임 학생회를 비판할 수 있고, 현임 학생회는 이에 대해서만 의견제시를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김주와 회장의 경우 세칙에 명시된 ‘uni-khu 선본이 제기한 비판에 대응한 것’이 아니다.

총여학생회 선관위원이 사과문이 필요함을 주장하자, 생명과학대 선관위원은

“잘못에 기반을 둔 사과문이 아닌 여론에 의해 작성된 사과문이 과연 옳은가”라며 김주와 회장에 대한 비난여론을 ‘부당한 여론’으로 규정했다. 결국 김주와 회장 징계는 무산되고 경위서 제출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김주와 회장은 이후 인터뷰에서 “결과와 상관없이 책임을 통감한다”며 “11월에 예정된 학생회 행사들을 진행한 뒤 자진사퇴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출된 경위서에 김주와 회장은 “선관위원으로서의 중립성을 의심하도록 만들기에 충분했다”며 “무거운 책임을 느끼며 유권자 분들께 죄송하다”고 적었다.

핵심교양 이수면제 신청안내

1. 신청대상: 2004~2007학년 재학생중, 급학기면제 받고자 하는 과목을 수강하고 있지 않으며 이수하지 않은 자
2. 이수면제 대상과목(학점부여 없음)
 - “대학영어”
 - “사고와 표현”, “보고서작성과 발표”, “생명과환경은문자성법”
 -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3. 면제기준 및 자격

가. 대학영어 이수 면제기준 및 자격

- 공인영어시험능력자로 계열별 TOEFL, TOEIC, TEPS 일정점수 이상자
- 국제화 추진 TOEFL, TOEIC, TEPS 전형 입학자
- 영어권 국적 외국인 특례입학자
- Intensive Program(DEEP, LEAP, REACH) 이수자
- 국제교류처 주관 영어권 학점교류교환학생 및 어학연수생

[이수면제 기준표]

면제 종류	계열	대학	면제 기준					면제내용
			TOEFL CBT	IBT	TEPS	TOEIC	G-TELP	
공인 영어 시험 능력자	외국어계열 사회계열	외국어대학 국제 - 경영대학	207 이상	76 이상	600 이상	700 이상	66(Level2) 이상	과목면제
	공학계열 자연과학 계열	전지정보대학 응용과학대학 (응용수학과, 응용물리학과, 우주과학과)	193 이상	69 이상	551 이상	650 이상	57(Level2) 이상	
		공과대학 생명과학대학 응용과학대학(응용화학과)	190 이상	68 이상	530 이상	640 이상	56(Level2) 이상	
		예체능계열 체육대학 예술 - 디자인대학	147 이상	51 이상	400 이상	510 이상	57(Level3) 이상	

※ 외부 공인기관 자격증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신청서와 성적표(원본)를 제출한다.

면제 종류	면제 기준	면제내용
국제화추진 전형입학자	국제화추진 TOEFL, TOEIC 전형 입학자	과목면제
특례입학자(영어권)	영어권 국적 외국인 또는 영어권 교포자녀, 영어권 재외국민	과목면제
Intensive Program 이수자	국제교류센터가 인정하는 - 재학 중 영어권 학점 교류자/어학 연수자로 선발된 자 - 외국 영어기관의 과정을 수료하고 상급성적을 취득한 자에 한함. - 영어권 국가에서 학점 인정 가능한 영어 어학연수/과정외국대학, 대학 부설 및 중·간 교육기관 프로그램 이수자(48시간(3시간×16주) 이상 이수) 후 고급 성적을 취득한 자.	과목면제
	평생교육원 DEEP, 국제교육원 LEAP, REACH 집중 프로그램 과정을 출석률 80% 이상, 성적상급수준으로 수료한 자.	과목면제

※ 신청기간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한다.

- ※ Intensive Program 이수자들은 증빙서류 제출한 자에 한하여 상황에 따라 검증을 실시하며, 통과자에 한하여 과목을 면제한다. (신청 기간에 제출)
- ※ 공학인증(ABEEK)대상자는 공인영어능력시험으로 영어 학점 인정 불가

나. 외국어대학 대학영어 / 전문영어 이수 면제기준

- ※ 외국어대학 핵심교양 이수면제 예외사항
- ※ 외국어대학은 학과적 특성에 의해 특정과목 수강으로 ‘대학영어’와 ‘전문영어’의 이수를 면제할 수 있음
- ※ 자신의 재전공이 아닌 타 전공의 외국어, 2과목을 이수하는 것으로 핵심교양 이수를 대체할 수 있음 [대체교과목]

제1단계	제2단계	총 이수학점
초급중국어회화1	초급중국어회화2	6
일본어강독1	일본어강독2	6
스페인어1	스페인어2	6
러시아어1	러시아어2	6
초급프랑스어1	초급프랑스어2	6

※ 이수면제를 신청하는 외국어대학 소속 학생은 외국어대학 행정실(T:031-201-2201)에 별도 접수 바랍니다.

다. 사고와 표현 영역 이수면제기준 및 자격

- 1단계: 독후감 평가 80점 이상을 득한 후 구술시험 통과자에 한하여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 2단계: 글쓰기 시험 80점 이상
- [이수면제 기준표]
- ※ 신청서 제출은 매 학기 지정하여 신청 기간에 제출한다.

단계	내용	평가 방법	학점	비고
1단계	독후감 평가 (관정도서 중 3편을 읽고 독후감 제출)	독후감 80점 이상 통과자에 한하여 구술시험	P/F로 부여	1단계 합격시 2단계 시험 자격 부여
2단계	(교재 내용 이해도 평가/논술 시험)	80점 이상 통과		

라. 전산영역 이수면제 기준 및 자격: 전산영역의 경우 이수요건 폐지로 인하여 이수면제 제도 폐지

4. 신청기간: 2017. 12. 1.(금) ~ 2017. 12. 8.(금) 17:00 까지
5. 신청장소: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 (멀티미디어교육관 507호)
6. 신청자 유의사항

- 2017학년도 1학기 현재 상기와목을 수강 및 이수하지는 신청할 수 없음.
- 본 제도는 일정능력보유자에게 과목이수를 면제하는 제도로서 학점은 부여되지 아니하므로 졸업에 필요한 학점은 별도로 이수하여야 함.
- 신청자격이 있어도 본 이수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과목이수를 면제받을 수 없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후마니타스칼리지 행정실로 문의하시기 바람. (☎031-201-3401~5)

7.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양식은 경희대학교 학사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증빙서류 원본

국제캠퍼스 후마니타스칼리지 학장

11월 넷째 주(11.20~11.24) 취업진로 프로그램 안내)

1. 기업체 채용행사 및 취업특강

행사명	일시	장소	비고
중견기업 바로알기 취업특강	11. 24.(금) 13:30~15:00	청운관 306호	취업 특강
중견기업 바로알기 취업면담	11. 24.(금) 15:00~16:30	청운관 1층 4번 상담실	취업 면담
저학년 진로 설계 아카데미	11. 24.(금)~11. 25.(토) 09:00~18:00	신청 : 11. 22.(수)	취업 및 진로개발
고학년 진로 멘토링	11. 27.(월)~12. 1.(금) 18:00~21:00	신청 : 11. 23.(목)	

※ 위 일정은 기업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참가방법: 사전 신청 필요(행사 당일까지 가능)
이연의 종합정보시스템 - 인터넷 신청 - 연수 신청 - 해당 설명회 '신청하기' 클릭 - 완료
- ※ 신청 후 '참석여부' 발표는 하지 않습니다.
- ※ 사전 신청 학생 및 당일 현장 신청도 가능하며, 신청서는 당일 해당 장소 출입문 쪽에 비치함.
- 출석 협조전 발급: 각 채용설명회 종료 후 현장 설명회장 입구에서 발급 및 배부
- 기타 사항은 미래인재팀(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취업행사 캘린더 참고.

2. 취업진로지도 및 채용 컨설팅 (취업상담)

- 대상: 본교 학부 재학생, 졸업생
- 상담 내용: 자기소개서 및 이력서 작성법 지도, 면접스킬 지도, 기업 및 직무 분석법, 로스쿨 진학 등

상담유형	일시	담당 컨설턴트	장소	신청방법
개인	월요일 ~ 금요일 (전원 컨설턴트)	이연의	오비스홀 355호	종합정보시스템 '수업/성적/상담/신청'
		박인경	제1법학관 107-2호	
		홍상기, 오신종	청운관 6번 상담실	

• 상담 신청자 의무: 취업준비도 겸사 [미래인재팀(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하단에 위치] 상담 전·후 각 1회(총 2회) 필수

- 주의사항
- 상담 당일 휴식 불가(상담 당일 1일 전까지 가능, 취소 시 전화 연락)
- 이력서와 자기소개서에 대한 피드백이 필요한 경우 당일 2부씩 출력하여 지참(필수)

3. 2017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 리쿠르팅

신청 기간	일시	모집 대상	신청방법
11. 13.(월)~11. 26.(일)	홈페이지 참고	4년제 대학교 2018. 2월 졸업예정자 및 기졸업자	이워홀 채용 홈페이지 온라인지원 (http://recruit.ourhome.co.kr)

자세한 사항은 미래인재팀(구, 취업진로지원처) 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하세요

🏠 <http://job1.khu.ac.kr>

📠 <https://www.facebook.com/khujob>

☎ 02-961-0167~8

✉ job@khu.ac.kr

📍 청운관 1층 학생생활지원존

서울캠퍼스 미래인재팀(구, 취업진로지원처)

보도

등책위, 기존 공간 두고 ‘평행선’

〈2017 마지막〉

안나연 기자 na@khu.ac.kr

【서울】 2017학년도 마지막으로 열린 5차 등록금책정위원회(등책위)가 그동안 의 과제를 2018학년도에 당선될 학생대표와 협의하기로 하며 마무리됐다. 지난 9일 열린 5차 등책위에서 결정되지 못한 내용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상한제’, ‘외국인 유학생 지원확대’ 그리고 ‘기존 공간 사용방안’이다.

이번 등책위에서 총학생회(총학)는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인상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내국인 학생의 등록금은 교육부에서 권고한 인상을 섹식에 준하여 책정된다. 이는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등록금 인상의 상한선을 두는 기준이다. 이 기준에 따르면 2018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은 1.5%까지 인상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번 등책위에서 총학은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것도 요구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총학의 입기가 얼

마 남지 않은 점을 이유로 들며 확답을 피했다. 총학은 내년 총학과 대학본부가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했다. 다만,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상한제’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확대’ 문제는 지난 8월 4일에 열린 4차 등책위에서도 미뤄진 바 있다.

기존 공간 활용 방안 확답 불가

지난 8월 4일 열린 4차 등책위에서도 총학은 ‘외국인 유학생 등록금 상한제’와 ‘외국인 유학생 지원확대’를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선 “지원확대에 대해서는 별도 TF를 마련해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이에 총학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을 것을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학생들의 의견을 듣는 것은 나중의 일”이라며 “등록금심의위원회 통과 이후 해당 자료를 제공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5차 등책위에서 총학은 학생들이 바라는 공간조정 내용이 담긴 ‘기존 공간 활용요구서’를 제출했다. 문과대학과 정경

대학, 자율전공학과 등에서 요구하는 강의실 추가 지정과 동아리, 소모임 공간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대학본부 측은 요구 반영 여부와 시기에 대한 확답을 피했다. 아직 사용승인 등의 절차가 남았다는 이유였다. 더불어 단과대학 공간 문제는 원칙적으로 각 단과대학 공간소위원회 내에서 결정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건물 신축에 따라 남은 공간을 활용하는 문제가 주요 안건인 만큼 등책위에서 나온 내용을 공간관리위원회가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재정에 산처 박성화 예산팀장은 “신축 건물로의 이전에 대한 문제니만큼 대학본부 측에서도 단과대학의 의견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4차 등책위에서도 총학은 기존 공간 활용 방안에 대해 협의하는 기구를 만들 것을 요구했다. 대학본부는 협의체 구성에 앞서 공간을 활용할 방식에 대해 단과대학 별로 작성한 계획안을 제공해 달라고 했다. 총학은 “이미 계획안이 취합된 상태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할 시기”라고 말했지만, 대학본부는 “계획안을 먼저 제 공받길 원한다”며 논의를 미룬 적이 있다.

회의록 공개 않는 총학, 소통은 어디에

이후승 기자 hooseung.lee@khu.ac.kr

【국제】 국제캠퍼스(국제캠) 제49대 총학생회(총학) 중앙운영위원회(중운위)와 확대운영위원회(확운위) 회의록이 올라 오지 않고 있다.

중운위는 총학의 전반적인 사안에 대해 공유, 논의하고 의결함으로써 총학의 권리를 지키고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회의이며 확운위는 과 단위 이상의 학생 자치조직이 참여하여 총학과 대학의 핵심 사업이나 사안을 논의하고 의결하는 회의다. 확운위 안건은 중운위 안건 상정 의결을 거쳐서 상정한다. 올해 초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체제에서 진행된 회의를 제외하면 중운위는 8차~15차까지, 확운위는 2차~4차까지 진행됐다. 학교 운영 및 학생 자치에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회의인 만큼 학생회 회원인 학생은 회의의 정보를 알 권리가 있다. 학생회칙 7장 62조 2항에도 ‘본 회(총학생회)의 운영, 의결기구의 회의 결과와 활동을 회원들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국제캠 총학이 운영하는 채널은 네이버

카페와 페이스북 페이지로 나뉜다. 이 중 네이버 카페 회의록 게시판에는 중운위 10차부터 12차까지의 회의록이 등록되어 있지 않다. 확운위 2차, 3차 회의록 역시 찾아볼 수 없었다. 페이스북 페이지에는 4차 확운위 결과만이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공됐다. 총학 진도원(스페인어학 2011) 회장은 “중운위 회의록을 작성한 노트북의 하드디스크 문제로 올라가지 못했다”고 했다. 확운위 회의록에 대해서는 “2차, 3차 회의록은 각 단과대학 학생회장 및 학과 회장에게 전달해 전파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우리 신문은 지난 기사(국제캠 총학, 지금까지 회의록 공개 0건-예산안 공고 2달치 뿐/대학주보 온라인, 2015.07.28.)를 통해 총학의 회의록 공개 의무 불이행을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총학 역시 ‘컴퓨터 문제’를 이유로 들었고 이번에도 비슷한 답변을 내놓고 있다.

정보 공개가 포털사이트 카페라는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현재 총학 카페에서 중운위, 확운위 회의록 게시글은 카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하다. 하지만 포털사이트 검색으로는 카페에 접근 자체가 어렵다. 네이버에서 ‘경희대학교 총학생회’를 검색하면 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 홈페이지만이 검색된다. 국제캠 총학 카페를 찾기 위해선 ‘카페’ 카테고리를 거쳐야 하는 등 접근성이 크게 떨어진다. 구글 역시 페이스북 페이지와 서울캠 총학 홈페이지만을 결과로 표시했다. 서울캠 총학은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만들어 가입 없이 누구에게나 모든 정보를 공개한다. 또한 중운위와 확운위 회의록을 빠짐없이 게재하고 있었다.

정태호(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학생회는 학생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대표자들이 있는 곳이다”며 “학내 민주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학생 대표 기구가 어떤 과정과 논의를 거쳐서 의사결정을 하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더하여 “정보 전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학생 자치라는 기관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전력 5%↓, 가스 12%↓, 수도 16%↓
2012년→2016년 에너지 소비량

장유미 기자 yummy0825@khu.ac.kr

【서울】 우리신문은 서울캠퍼스(서울캠)의 총 에너지 소비량 변화를 살펴 봤다. 그 결과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전력 사용량은 5%, ▲도시가스 사용량은 12.3%, ▲상하수도 사용량은 16.9% 가량 감소했다.

2011년 지식경제부가 에너지 수급을 안정시키고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에너지 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를 내림에 따라 우리학교가 에너지 다소비 건물로 지정된 적 있다.

그 후로 우리학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다. 그 일환으로 2013년 서울시와 ‘그린캠퍼스 협의회 MOU’를 체결했다.

그린캠퍼스 협약에 의거해 서울캠은 2012년 기준 2017년까지 면적 당 총 에너지 사용량을 10% 줄여야 한다. 2012년 이후 2016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였던 것은 아니지만, 2016년을 기준으로 도시가스, 상하수도 사용량에서는 10% 감량 목표를 달성한 상태다.

서울캠 관리팀 김태우 계장은 “최근 기숙사가 준공되면서 건물 면적이 늘어났다”며 “분묘가 늘어났으니 목표치에 더 가까워졌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에너지 절약 위한 설비개선
구성원 전체 관심도 절실

우리학교는 한국전력공사, 에너지관리공단 등 외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유치해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교체를 꾸준히 진행해왔다. 도시가스 사용량 절감을 위해 고효율 기기를 설치하고, 전력 사용량 절감을 위해 형광등에서 LED로의 교체를 진행했으며 절수기를 설치해 상하수도 사용량을 줄이려 노력했다. 또한, 최근 신축된 단과대학동엔 태양광 전력 수급 시스템이, 행정 기숙사에 지열을 활용한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했다.

우리학교 포함 서울의 34개 회원대학으로 구성된 ‘서울 그린캠퍼스 협의회’는 에너지 다소비기관이었던 대학을 그린캠퍼스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협의회다. 이는 서울시가 주관하며, 회원대학간 정보교환, 우수성공 사례 공유 및 전파, 전담 조직간 인적 교류를 통해 그린캠퍼스 조성 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린캠퍼스 협의회’ 가입은 에너지 절약을 위해 적

극 노력하겠다는 우리학교의 선언이었다.

서울 그린캠퍼스 협의회 회원 대학 중 하나인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도 눈에 띄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현황을 보였다. 한양대학교는 2012년에 대비해 2016년까지 ▲전력 사용량 8.9% ▲도시가스 사용량 11.3% ▲상하수도 사용량 5.1% 가량을 감축했다.

지난 2013년 서울 그린캠퍼스 협의회 출범 이후 서울캠 후마니타스 칼리지(후마)는 그 협약의 일환으로 매년 서울시 에 ‘에너지절약 실천 시민협력 사업 및 그린캠퍼스 조성사업 지원 사업’에 선정돼 2,000~3,000만 원의 지원을 받아왔다.

이후 2014년엔 서울시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경희대 에너지 협동조합 추진위원회(추진위)’를 만들어 청운관 1층, 2층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 했다.

2015년엔 에너지 문제 인식 제고를 위한 체험활동, 캠페인을 기획했으며 자취방 두 곳을 선정해 단열 개선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에너지 소비 효율화를 위한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올 해엔 2014년과 마찬가지로 청운관 지하의 형광등을 LED로 교체했으며, 이 밖에 ‘에너지 절약 및 소비’ 관련 기획 강의 또한 매년 정기적으로 진행됐다.

2014년 당시 추진위 위원장이었으며, 현재 그린캠퍼스 사업을 총괄하는 후마 실천교육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진해 교수는 “지원금으로는 원칙상 학교 시설을 교체하거나, 에너지 수급 방식을 바꾼다거나 할 수 없다”며 “매 학기 교육을 진행하거나, 학교의 대응자금으로 건물 특정 층을 대상으로 LED 교체 작업을 진행하고, 2015년처럼 몇몇 인근 가구를 대상으로 단열 개선 공사를 시행하는 등의 상징적인 활동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또한 김 교수는 “학교 차원에서 에너지 정책을 제안하거나 캠페인을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없어서 아쉽다”며 “지원금 의존을 넘어서서 LED로의 전면 교체, 태양광 사용 등의 방안을 정책적으로 확장해 실질적인 에너지 절약을 이루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해 에너지 절약 문제에 대한 학교 전체적인 관심이 잇달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관리팀 김 계장은 에너지 사용량 10% 감량이라는 목표치 달성과 더불어 장기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해 “이때까지 해 오던 것들을 연장해서 진행할 계획이며 새로운 사업 유치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희롱을 친밀감의 표현으로 착각하는 것은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해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을 느꼈다면 성희롱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igepe.or.kr

〔2015년 폭력예방교육 슬로건 수상작〕
성희롱 예방 주선

〔서울캠퍼스〕 성평등상담실 02-961-0246 (학생회관 102호)
〔국제캠퍼스〕 미래혁신원 학생지원팀 031-201-2806 (학생회관 218호)

폭력에 민감하게 인지하고 용기있게 대응함으로써 폭력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www.mogef.go.kr
한국여성정책연구원 www.kigepe.or.kr

〔2015년 폭력예방교육 슬로건 수상작〕
성희롱 예방 주선

〔서울캠퍼스〕 성평등상담실 02-961-0246 (학생회관 102호)
〔국제캠퍼스〕 미래혁신원 학생지원팀 031-201-2806 (학생회관 218호)

교수·조교 상호존중 필요한 때

전문가 칼럼

김중백
사회학 교수



최근 고용노동청이 동국대 대학원생 총학생회의 손을 들어준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할 거리를 안겨 준다. 동국대 대학원생 총학생회는 대학원생 조교에 4대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대학 본부를 고발한 건이다. 필자도 경험한 대학원생은 석사 혹은 박사라는 학위를 취득하고 이를 통해 학문적, 사회적 성취를 이루기 위해 학업에 전념하는 신분을 뜻한다. 하지만 일반적인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대학원생은 소수에 불과하며 다수의 대학원생들은 경제 부담을 덜고 학과의 필요에 의해 조교생활을 선택한다. 이번 고발사건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경시되어 왔던 대학원생의 노동권 관련 분쟁을 양지로 가져 나왔다는 점에서 학술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고 학술 후속세대의 인권 문제를 개선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대학원생 노동관련 분쟁, 학술 공동체를 건강하게 한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배경에는 학교와 교수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조교가 자신의 업무에 만족하고 학교와의 소통이 원활하게 됐다면 소송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사실 이번 사건은 대학원생 조교가 겪는 불합리한 처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학부생에 비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적으며 학위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기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대학원생의 소리 없는 외침이 4대보험과 퇴직금을 통해 분출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교수 역시 책임이 없다 할 수 없다. 교수에 의해 대학원생의 학문적, 개인적 삶이 지배되는 현실



조교의 역할과 책임의 바른 규정과 생활 및 연구 여건의 안정이 시급하다.

을 보여준 〈나는 지방대 시간강사〉란 책이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듯, 일부 교수들은 대학원생의 노동과 시간을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으며 조교제도가 이렇게 잘못된 사제관계를 유지시키는 핵심 고리로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대학원생의 조교업무를 일반적인 노동과 같은 선상에서 보는 시각도 타당하지는 않다. 조교업무는 일반적인 노동 이외에도 교수와의 협업을 통해 학문적 성과를 내는 역할도 포함하기 때문에 노동과 교육의 결합으로 이해하는 게 더욱 바람직하다. 돈 문제는 이 사태의 핵심이 아니다. 학교에서 대학원생에게 조교자리를 제공하는 것은 학생의 복지 차원에서 시행되는 측면이 크다. 사정은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명의 대학원 조교가 1년 동안 받는 전액장학금을 더하면 대략 비정규직 직원 1명을 고용할 수 있다. 행정 효율성만 따지면 조교 2명보다는 직원 1명이 더 유리하며 예산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조교제도는 학문을 하려는 젊은 인재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교육적 효과를 제공하기 위해 대부분의 대학에 존재한다. 그런데 조교들이 업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조교 생활이 오히려 학업에 장애가 된다면 이는 조교업

무가 과거의 잘못된 관행에서 여전히 벗어나고 있지 못함을 의미한다. 더욱이 조교들은 업무 과정에서 불합리함을 경험해도 하소연할 곳이 마땅치 않다. 조교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조교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아직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우리 대학원에서 공부하려는 사람은 더욱 줄어들어 학문의 연속성은 지속되기 어렵게 된다.

조교, 업무 과정의 불합리함 하소연할 곳도 마땅치 않다

다행히도 우리학교는 대학원장님을 중심으로 상황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지난 10월 27일에는 ‘대학원생 인권 어디까지 왔나’라는 토론회를 열어 대학원생 인권 문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현실의 문제를 인지하고 그 중요성을 공유하는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남은 과제는 대학원생 조교에 대한 표준적인 업무와 이에 따른 책임, 그리고 조교로서 누릴 수 있는 교육적 혜택을 명확하게 규정한 표준화된 조교 임용 및 관리 규정을 도입하고 이를 관리, 감독하는 책임 행정의 시행이라고 생각한다. 경희대

학교에서 조교가 된다는 것은 대학원생에게 영광되고 보람된 일이 되어야 한다. 경희대에서 조교를 하는 것이 힘들고 불행하면 이는 곧 우리 대학의 학문 공동체를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대학원생 역량 발휘 위해 연구여건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우리 대학의 설립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학술의 권위를 세우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과제이다. 학술 진흥은 이름만 알려진 학자 몇 명을 모셔 오므로 달성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며 교수와 조교의 상호존중에 의한 공동 작업을 귀하게 여기는 대학원의 학풍과 전통 확립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대학원생은 학문 탁월성 구현의 주인공이자 교수의 연구 및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조력자이다. 이렇게 막중한 책임을 가지는 대학원생이 그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서는 조교의 역할과 책임의 바른 규정과 이에 기반을 둔 생활 및 연구여건의 안정이 필수적이다. 더 늦기 전에 미래 지향적인 대학원 학술 문화 확립을 위한 조교제도 운영방안이 제시되기를 기대해본다.

참여마당

황지성
(원자력공학 2012)



우리는 지금 탈-라디오포비아를 해야 할 때

얼마 전 흥미로운 글을 읽었다. 후쿠시마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일본여행을 다녀오려는데, 괜찮겠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다. 요지는 이러했다. 이미 도쿄도 오염된 지 오래이며, 음식도 오염됐으니 절대 일본으로 가지 말라는 것이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은 어떠한가? 나는 안심하고 다녀와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다.

6년 전 2011년 3월 11일, 후쿠시마에 쓰나미가 덮쳤다. 재난에 인재를 겹치면서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에서 재앙이 발생했다. 이후 SNS를 통한 수많은 유언비어와 부정확한 정보의 확산으로 일본 여행을 기피하는 증상이 나타났다. 현상의 원인은 다양하다. 우리는 진단을 위해 X선을 찍는 것과 같은 의도적인 방사선 피폭에 대한 거부감은 잘 느끼지 못한다. 하지만 의도치 않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에 대해선 큰 반감을 느낀다. 여기에 방사선에 대해 지나친 공포심을 느끼는 ‘라디오포비아(Radio-phobia)’가 더해진다.

적당한 두려움과 경각심 도움이 되지만 지나치면 독이된다

라디오포비아(Radio-phobia)란 ‘과도한 방사선 공포증’이란 말로, 1903년 솔랜드 박사가 처음 주장했고 체르노빌 사고 후 유럽에서 유행했던 신조어다. 대한민국도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라디오포비아에 휩싸여 있다.

우리가 느끼는 공포는 과학이 말하는 사실과 다르다. 28개국 전문가 80명이 2년간 조사 후 내린 결론을 담은 유엔방사선영향과학위원회(UNSCEAR)의 ‘2013 후쿠시마 보고서’는 이주민의 모든 생애 피폭선량 추정치가 약 10밀리시버트(mSv)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이 1년간 피폭하는 자연방사선은 약 3mSv이며, CT 촬영 한 번이 약 10mSv 정도 된다. 핀란드, 이란 람사르, 인도 케랄라, 브라질 가리바리, 미국 덴버 등에 사는 사람들은 이 이상 수준의 자연방사선을 받고 있으나 건강에 아무 지장 없이 잘 살고 있다.

음식에 의한 내부피폭을 걱정하는 사람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여러 연구 논문들에서 보여준 결과를 보면 불필요한 걱정이란 것을 알 수 있다. 후쿠시마 사고 후 방사성물질에 섭취한 이주민들에 대해 내부 피폭 정도를 조사 해본 결과 평생에 걸쳐 받는 방사선의 양이 1mSv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예도 존재한다. 만약 우리가 일본에서 건너온 오염된 고등어를 1년 동안 매일 1kg씩 먹는다고 해도 내부 피폭량은 고작 0.002mSv에 불과하다고 한다. 실제 원자력병원에서 근무하는 박사님의 강연 중의 내용을 일부 차용한 것이다. 적당한 두려움과 경각심은 건강한 생활에 도움이 되지만 무엇이든 지나치면 독이 된다. 우리는 방사선 공포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는 건 아닌지, 그리고 그에 사로잡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해봐야 한다. 굳이 후쿠시마에 여행을 가는 기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 외의 지역을 여행하는 것은 당신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다. 객관적 사실에 기반을 둔 연구 결과들이 이 의견을 뒷받침하고 있다.

2018학년도 전기 유엔평화학과 평화복지대학원 신입생 모집



「국제기구 진출의 청경」

- UN산하 및 관련기구인UNITAR, WFUNA 인턴쉽 매년 18명 제공
- 졸업시 유엔평화학 석사학위 수여(Master of Peace Studies)
- 전 과목 영어로 강의
- 주중, 야간, 주말 수업 제공

- **모집과정**: 석사과정
- **모집전공**: 유엔평화학과(유엔평화전공)
- **수시모집기간**: 2017년 10월 10일~2018년 1월 15일
- **전형방법**: 서류심사 및 면접(접수완료 원서기준 수시면접 실시)
- **합격발표**: 면접완료 대상자기준 합격자 수시발표
- **온라인 원서접수**: <http://www.unpeace.khu.ac.kr/>
 - 원서지원은 온라인으로만 가능함
- **문의처**
 - 이메일 gjp@khu.ac.kr • 문의전화 031-570-7012~6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제43회 중앙도서관 독서토론회

‘대한민국 미래를 보다’

한국인만 몰랐던 더 큰 대한민국



2017.11.22(WED) 15:00

강연 | 이만열 교수 (경희대 국제대학)

일시 | 2017.11.22 (수) 오후 3시

장소 | 서울캠퍼스 중앙도서관 1층 시청각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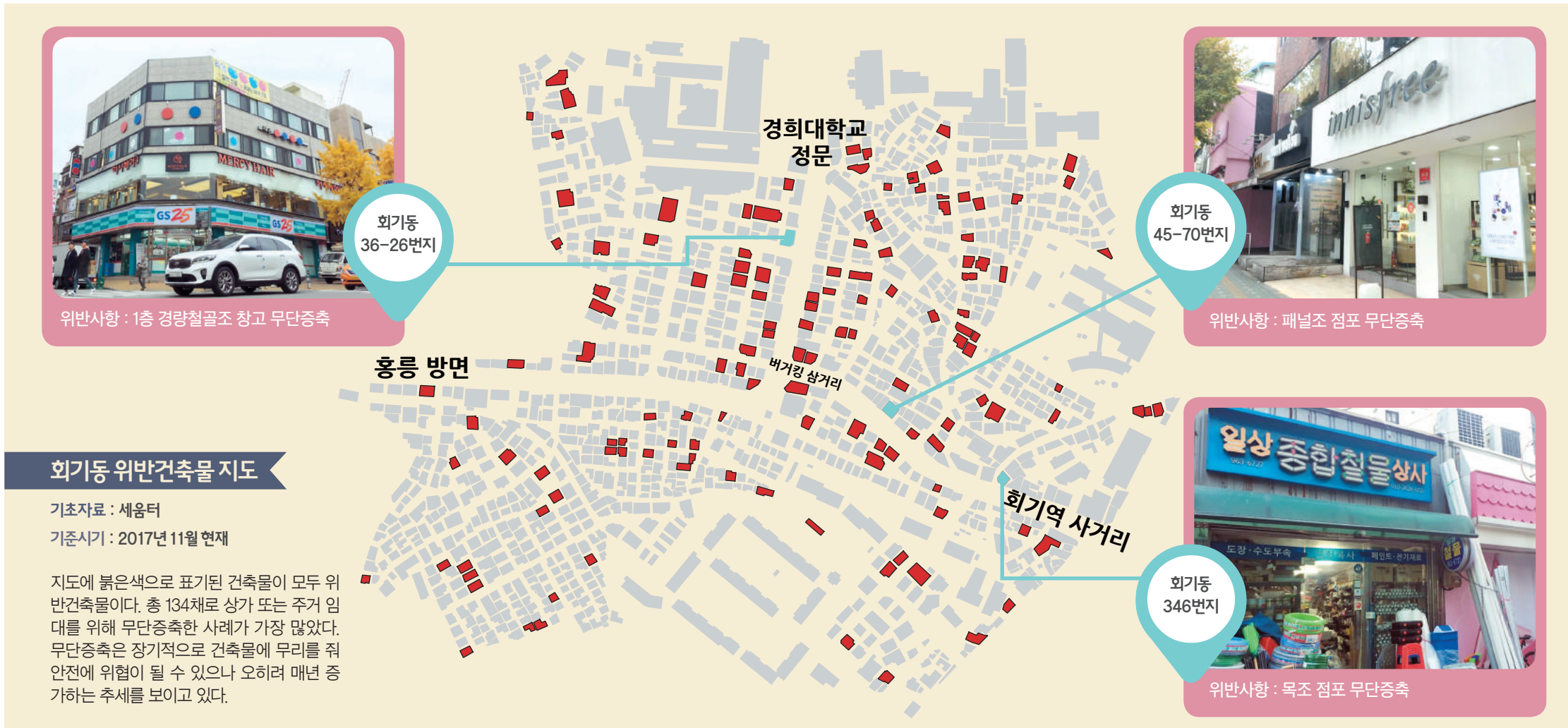
내용 | 강연, 도서증정행사, 사인회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
KYUNGHEE UNIVERSITY CENTRAL LIBRARY

기획

회기동 위반건축물 3년 사이 14.5% 증가



회기동 위반건축물 실태 - ①

박지영 기자 kitty2988@khu.ac.kr

【서울】 2년 사이 회기동 위반건축물이 1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공간정보포털의 'GIS건물통합정보'를 토대로 회기동 건물 1,312채를 전수 분석한 결과다. 2015년 11월 117채였던 위반건축물은, 2016년 11월 124채, 2017년 11월 134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회기동 건물 10채 중 1채가 위반건축물인 셈이다.

특히 건축물 종류별로 살펴볼 때 '근린생활시설'의 위반이 두드러졌다. 근린생활시설이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로, 슈퍼마켓, 미용원, 음식점 등이 포함된다. 회기동 내 근린생활시설의 위반건축물 비율은 19.2%로, 단독주택의 위반건축물 비율 10.1%와 9.1%p 차이를 보였다. 동대문구 다른 동의 근린생활시설 위반건축물 비율과 비교해도 회기동의 위반건축물 비중이 두드러졌다. 동대문구 근린생활시설의 위반건축물 비율은 9.9%로 회기동과

비교해 절반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의 배경은 결국 '월세' 문제다. 위반건축물에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보다 평수를 늘려 임대료를 많이 받는 것이 이익이 크기 때문이다. '이행강제금'이란 불법 건축물로서 적발된 이후 시정명령을 받았지만 명령 이행을 하지 않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다. 실제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매출통계' 자료에 따르면 우리학교 인근 음식점과 생활서비스 업종 등의 월 매출은 2,700만 원 수준이었다. 반면 이행강제금 산출공식에 따라 회기동 가게별 이행강제금 평균을 추산해보면 월 40만 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인근 부동산들 역시 당연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공인중개사 A 씨는 "이행강제금을 내면서 임대료를 받는 게 훨씬 더 이익"이라며 "처음부터 무단증축으로 설계를 해서 짓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인 탓에 위반건축물로 지정되더라도 오랫동안 시정하지 않는 경우가 잦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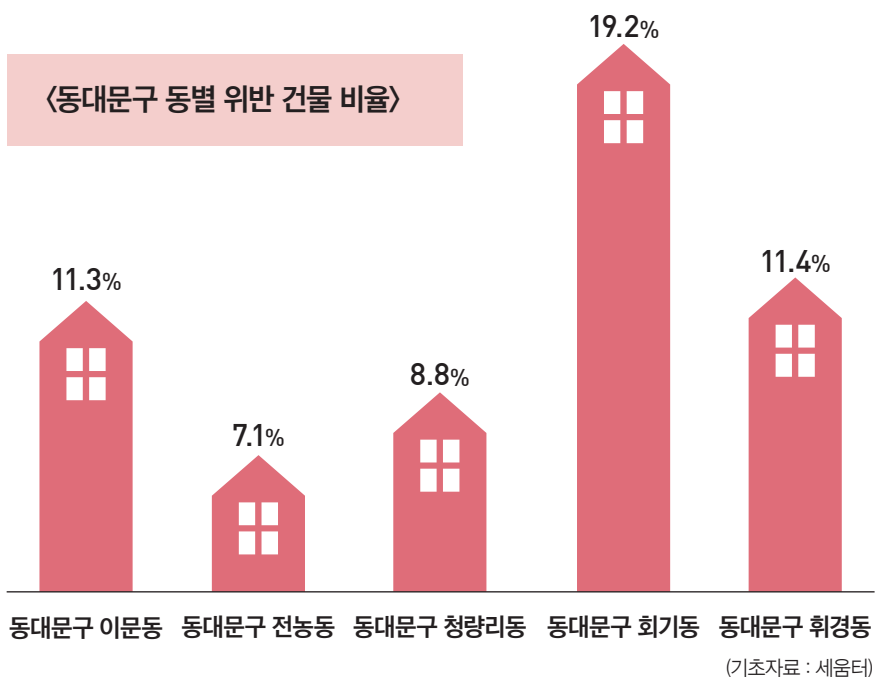
회기동 위반건축물 134채 중 88채

(65.7%)가 5년 이상 위반사항을 개선하지 않고 있다. '에워드하우스'가 입점해 있는 회기동 346번지의 경우 2005년 8월 무단증축해 점포를 운영하는 것에 대해 지적 받았으나 이후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옷가게 '마쉬멜로우'가 입점한 회기동 45-70번지 역시 지난 2008년 1월 1층에 판넬로 건물을 증축했으나 시정하지 않은 상태다.

위법건축물 중에는 우리학교 법인 소유도 있었다. 회기동 36-26번지에 위치한 건물로 GS25 편의점과 중국집 용성 등이 입주한 건물이다.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이 건물은 1층 주차장에 8㎡ 크기의 경량철골조를 무단 증축한 것으로 나온다. 해당 공간은 현재 중국집 '차이나타운'이 식료를 나누는 창고로 쓰고 있다. 법인은 무단 증축된 사실을 모르고 있지 않으며, 세입자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인 사업부 김경태 팀장은 "철거를 하려 했지만 장사를 하시는 분이 꼭 필요한 공간이라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해 놔두고 있다"며 "이행강제금 또한 차이나당이

내고 있으며, 만약 다른 세입자에게 피해가 간다면 바로 철거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대문구청 측은 관련 문제에 대해 원론적 입장만을 밝혔다. 동대문구청 주택과 김

성균 주무관은 "불법 건축물 단속을 수시로 하고, 민원이 들어오면 단속을 나간다. 공사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목련회의 · 목련음악회
경희대학교 Magnolia 2017
일시: 2017년 12월 19일 화요일 장소: 평화의 전당
1부 목련회의 오후 6시 30분
2부 목련음악회 오후 8시

2017 경희의 한해를 돌아보고 새 희망을 공유하는 목련회의, 클래식과 대중음악이 어우러지는 선물같은 음악회 "경희대학교 Magnolia 2017에 여러분을 주인공으로 모십니다"

- 박쥐의 서곡
- Zigeunerweisen Op. 20 - Pablo de Sarasate (Vn, 양고운)
- F. Lehar - Die Lustige Witwe (유쾌한 미망인) 中 Lippen Schweigen (입술은 침묵하고) (이아경 이기업, 김대현)
- Strauss - Die Fledermaus(박쥐) 中 Champagne Song(삼페인의 노래) (이아경, 협창 20명)
- 도나우 왈츠
- Auf der Jagd Polka Op. 373 - Johann Strauss II '사냥 폴카 - 요한 슈트라우스 2세'
- 라데츠키행진곡
- K-POP 대중가수 공연
- 목련회 합창

빛나는 그대여,
경희의 얼굴이 되어라!

**경희대학교
홍보대사
희망
12기모집**

모집인원: 10명
지원자격: 1. 대학 1학년 1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
2. 학업 성적 우수 (전 학년 1학기 성적 80점 이상)
3. 학업 외 활동 경험 풍부
4. 학업 외 활동 경험 풍부
5. 학업 외 활동 경험 풍부

신청기간: 11월 20일(월) ~ 11월 25일(토)
신청방법: 1. 학교 홈페이지 (http://www.khu.ac.kr)에 접속하여 신청
2. 학교 홈페이지 (http://www.khu.ac.kr)에 접속하여 신청
3. 학교 홈페이지 (http://www.khu.ac.kr)에 접속하여 신청

선정방법: 1. 서류 심사
2. 면접
3. 최종 선발
4. 최종 선발

문의처: 1. 학교 홈페이지 (http://www.khu.ac.kr)
2. 학교 홈페이지 (http://www.khu.ac.kr)
3. 학교 홈페이지 (http://www.khu.ac.kr)